법사위원장 합의 등 원구성 난항… '초당적 협력' 시험대

원구성 갈등에 후반기 국회 암운
민주당 '재검토' vs 국힘 '반발'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의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안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합의 파기 예고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조만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야 구도가 바뀌었고, 전반기 국회의장단도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면서다. 다만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지난해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게 관례인 만큼, 민주당은 24일 당내 의장단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부의장 후임을 선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은 운영위·정보위·국방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관례로 맡아왔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알짜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라서다.

법제사법위(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본회의로 올리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기도 한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안을 법사위가 재검토해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올해 5월까지 맡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올해 6월부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합의안이었다. 여기에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구조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나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1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윤호중-김기현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임 원내지도부의 법적인 책무와 권한까지 합의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여야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구체적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초당적 협력'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6·1 지선도 네거티브 공방 여전… 민생 이슈는 '실종'

李 출마 놓고 '불체포 특권'
화천대유 특검 등 공방 격화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계양을 후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의원 불체포특권'을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이재명 위원장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의 출마를 불체포특권과 연결 짓는 것도 자연스런 맥락으로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고문이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자 "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결국 이런 식의 비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고문은 지난 15일 인천 대공원 즉석연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벌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박형준 부산 시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엘시티 개발 사업,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을 합한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문은 "누가 부패했는지, 진짜 도둑인지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나"라며 "한 푼도 (개발이익을) 환수 못한 게 국민의힘 단체장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지선이 대선 직후 치러지는 대형 선거라는 점과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의 네거티브 득세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전통과 청년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www.gijang.go.kr/tour/index.gijang

K 콘텐츠의 중심에서 만나는
최고의 인생 스팟,
여기는 기장입니다.

부산 도심 속에서 만나지 못한 특별한 순간을
빛과 물, 꿈의 도시 기장에서 꿈꿔보세요.

대변항
MBC드라마 <쇼핑왕루이>와 영화 <친구> <보안관>의 촬영지

죽성드림세트장
SBS드라마 <드림>을 위해 지어진 장소
현재는 기장대표명소이자 일출명소

기장 아트인 오리
예술촌이 형성되어 있는 기장 대룡마을 내에 위치
무인카페, 전시관 등 감성사진 명소

임랑해수욕장
기장 8경 중 하나.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해맞이·해넘이 명소

아홉산숲
영화 <군도>, SBS드라마 <더킹:영원한 군주> 등
다양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대나무 숲

기장군